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정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경정(1교시) 시험 과목 : 국제법(03), 행정법(02)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국 제 법

1.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과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해통항에서 군용 잠수함은 수면에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하지만, 통과통항에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잠수항행이 가능하다.
- ② 연안국은 외국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나포는 할 수 없고 단지 퇴거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연안국은 외국군함의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협 내에 기뢰부설 등의 위험이 있더라도 요청이 없는 한 이를 공표할 의무까지는 없다.
- ④ 통과통항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된다.

2.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 |
|-----------|----------|
| ㉠ 배타적경제수역 | ㉡ 통과통항제도 |
| ㉢ 군도수역 | ㉣ 접속수역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3.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한다.
- ②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③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모든 국가는 연안국의 동의 없이 연안국의 대륙붕에서 정착성어종을 수확할 수 있다.

4.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은 EEZ에서 생물 및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② 연안국은 EEZ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 ③ 관련국 간에 발효 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EEZ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섬의 존재를 반영하여 EEZ 경계를 획정하였다.

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①	근접성	형평한 해결	육지의 자연적 연장
②	육지의 자연적 연장	중간선	근접성
③	근접성	자원의 공정한 분배	육지의 자연적 연장
④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

6.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피추적선이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들어가면 추적은 종료되어야 한다.
- ③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 ④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V Saiga호 사건(1999년)에서 기니 정부의 추적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7.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당사국은 이 협약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②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 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만 회부될 수 있다.
- ③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확정 등 해양경계확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를 서면선언할 수 있다.
- ④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협약상의 강제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8. 1982년 「UN해양법협약」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게 수행 되도록 보장한다.
- ②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통고한다.
- ③ 국가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한 평가한다.

9.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 ②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 ③ 「UN헌장」과 1967년의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국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발사국이 절대책임을 진다.
- ④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 책임을 진다.

10.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보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 보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 원수의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
- ② 소송의 주체가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개인의 복직과 관련된 경우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해당 국가간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 ④ 협약의 목적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1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외교관의 면제는 실질적으로 파견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자는 외교관이 아니고 파견국이다.
- ② 외교관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으며, 외교관의 가족의 범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가족의 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③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외교관의 가족은 접수국을 퇴거하는데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 ④ 외교관의 배우자가 접수국에서 직업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접수국은 이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13.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영사 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 ②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 ④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14.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 ①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 ②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 ③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④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

15. 국가책임 관련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불가항력과 달리 조난의 경우, 행위 주체의 측면에서 의무의 준수 여부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 ②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은 자연적 또는 물리적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인간의 행위로는 발생될 수 없다.
- ③ 필요성(긴급피난)은 대응조치, 자위 등의 사유와 같이 선행되는 국제의무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
- ④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해당 규범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법 규범의 위반을 정당화한다.

16. 국제적 분쟁의 해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상적으로 교섭은 제3자가 개입하는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이 사용되기 전에 분쟁해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사용된다.
- ②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당사국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에 의한 해결이 시도될 수 없다.
- ④ 모든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관할권을 갖는 국제사법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17.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③ 재판소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18. 환경문제의 특성에 따라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환경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협약을 만들고 그 후에 의정서를 추가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크다.
- ② 국제환경법의 이행과 준수는 주로 상호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 ③ 환경보호를 위한 법은 국제법이 먼저 정립되고 이를 국내법이 수용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 ④ 국제환경조약의 체결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NGO, 다국적기업 등 비국가행위자의 참여가 활발하다.

19.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 ② 비정규군이나 조직적인 저항단체의 구성원은 일정한 경우,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 ③ 교전행위를 행하여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가 포로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 ④ 무력충돌 당사국의 상선 승무원이나 민간 항공기 승무원은 일정한 경우,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20.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 ② 「WTO설립협정」은 「UN헌장」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 ③ 국가만이 「WTO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회원국은 「WTO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 이상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② 정식조약과 달리 약식조약의 유형으로 구두조약이 포함된다.
- ③ 조약 외에 협정, 규약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외국 사기업 사이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

2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ICJ는 2개국 간의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② ICJ는 분쟁 당사국간 회의의사록이 ICJ 관할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하였다.
- ③ ICJ는 회부된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규를 해석할 때 형평(equity)을 고려하여 판단한 적이 없다.
- ④ ICJ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3. 국제관습법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인권법의 영역에서는 법적 확신보다 국가 관행이 더 중요하다.
- ②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에서 명백히 또는 집요하게 반대해 온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입장이다.
- ③ 최소한 해당 문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실행이 공통적일 필요가 있다.
- ④ 국내 법원의 판결도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24. 국제법상 분리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분리독립에 의하여 국가가 탄생한 예가 없다.
- ② 어느 국가의 중앙정부가 그 국가 영역 내 특정 지역을 통제하는 지방 조직을 국가로 승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국가가 탄생한다.
- ③ 어느 국가의 영토 일부 및 그 영토상의 주민이 분리독립하는 경우 그 국가의 계속성은 소멸한다.
- ④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자결권 행사를 통해서 분리독립이 실현된 예가 없다.

2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거하여 난민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 ② 체약국은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체약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 ④ 체약국은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강행
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노예매매, 집단살해, 테러금지, 일반적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범으로 명시되어 있다.
-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규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으나 그 후에 출현한 새로운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 ㉣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④ ㄷ, ㄹ

27.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 ① 교섭→서명에 의한 인증→비준→등록→비준서 교환
- ② 교섭→비준→서명에 의한 인증→등록→비준서 교환
- ③ 교섭→비준→비준서 교환→서명에 의한 인증→등록
- ④ 교섭→서명에 의한 인증→비준→비준서 교환→등록

2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 ② 조약이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3국의 동의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제3국의 동의에 따라 부여된 조약상 제3국의 권리는, 제3국의 동의 없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당사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없다.
- ④ 제3국의 동의에 따라 부과된 조약상 제3국의 의무는, 당사국과 제3국이 달리 합의하였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의 동의 없이 당사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2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그 조약의 본질적 기초에 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② 「UN헌장」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법 원칙들에 위반되는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
- ③ 조약의 적법성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 ④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30. 한국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법원은 재판에서 이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 ② 조약은 그 자체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국회가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만 이를 통하여 적용될 수 있다.
- ③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항상 국내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에 이견이 없다.
- ④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국이 당사국인 모든 조약의 위헌성 심사를 할 수 있다.

31.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UN 회원국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분쟁이 종료된 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 ② 「UN헌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자위권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허용된다.
- ④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necessity)은 요구되나, 비례성(proportionality)은 요구되지 않는다.

32.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재산에 대한 수용은 수용국가의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주권행사로 인정된다.
- ② 일반적으로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③ 외국인의 재산에 대해 수용조치를 취할 경우 수용국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계약상의 권리는 재산개념에 포함된다.

33.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범과 주권면제가 충돌하는 경우 강행규범이 우선한다.
- ② 목적을 기준으로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면 국가의 대부분의 행위가 주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 ③ 한국에는 주권면제에 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따른다.
- ④ 주권면제협약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특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채용되는 경우 주권면제가 부인되지 않는다.

34.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UN은 자신의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UN은 임무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 ③ UN의 공관, 재산, 문서는 불가침이다.
- ④ UN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35.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외국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이를 외교적 보호라고 한다.
- ② 피해자인 자국민이 원하는 경우 국가는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의무이다.
- ③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침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다.

36. 다음 중 개인청원(통보)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문서는?

- ① 「세계인권선언」
-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 ③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④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37.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인도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다.
- ② 일반적으로 인도 대상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 쌍방의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국가원수에 대한 살해는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자국민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자국민을 타국에 인도한다.

38.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ICC는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② ICC는 범행 당시 20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UN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관한 로마협약」 비당사국 국적의 범인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 비당사국의 ICC 재판권 수락 선언은 필요없다.
- ④ ICC재판관 선출은 당사국총회에서 출석한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39.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해사기구(IM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조선·해운과 관련된 안전, 해양환경 보호, 해상교통 촉진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 ② 세계기상기구(WM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기상 관측 및 이용 등에 관련된 세계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 ③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인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④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핵시설 및 핵물질의 안전, 방사능 오염방지 등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40.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가침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외교공관에서의 비호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접수국의 경찰은 불법무기를 적발하기 위하여 공관장의 동의 없이도 대사관을 수색할 수 있다.
- ③ 접수국의 경찰이 대사관 차량을 운전중인 외교관을 차량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접수국 당국에 의한 외교공관의 도청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 정 법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제2차 계고처분
- ② 「농지법」에 의하여 군수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에 따라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하는 행위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행위
- ④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 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 ②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3.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 ②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 신고행위와 징수처분
- ③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 명령
-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4.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 ① 취소소송
- ② 무효등확인소송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④ 기관소송

5.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②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견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 ③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통치행위로 보았다.
- ④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법리와 관련된다.
- ②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③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 ④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7.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 ④ 감사원 규칙

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 ① 발명특허
- ② 교과서의 검정
- ③ 행려병자의 유류품처분
- ④ 도로구역의 결정

9.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 ②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③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1.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1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 ②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 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②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④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14.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구(舊)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 ㉢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15.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과세처분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 ③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④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16. 행정대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 자체에서 의무 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 사용 중지 명령이 있는 경우, 이 중지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④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17.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게고하여야 한다.
-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 ④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독촉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공매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9.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 ㉢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에 대한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과징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에 과징금 부과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③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④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1.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②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④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④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임시처분은 집행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5.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 ②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 ③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 ④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26.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 ②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히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구(舊) 「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④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27.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 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 ③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한 경우

28.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 및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29.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0.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③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3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③ 구(舊)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 ④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위법하다.

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④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태책임에서 배제되지만 소유권의 포기 당시 경찰상 위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때에는 원소유권자의 경찰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② 근로자가 직무수행상 위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감독책임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책임을 감경되지 않는다.
- ③ 행위책임은 고의·과실과 무관하며, 행위자가 미성년자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 ④ 도로에 인접한 상점의 진열장에 통행인의 주의를 크게 끄는 진열을 하여 진열장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통에 중대한 방해로 가져오는 경우에도 진열장을 설치한 자에게는 경찰책임을 인정되지 않는다.

34.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②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 ③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④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3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④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7. 행정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8.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 ②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 ④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39.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③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상수원의 오염을 우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④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40.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고, 이때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은 물론 공무원 개인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④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